

세계 10위의 빛과 그림자

특허부문 평가 ‘논란’ 과학문화는 여전히 하위

우리나라의 과학기술 경쟁력이 세계 10위권에 진입한 것으로 평가됐다는 반가운 뉴스가 전해졌다. 최근 발표된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의 ‘세계 경쟁력 연감 2002’는 한국의 과학기술 경쟁력은 지난해 21위권에서 10단계가 오른 10위로 평가했다.

이 평가는 한 나라의 경쟁력이 한해 만에 10단계나 경충 뛸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을 자아낸다. 더구나 장구한 시일이 소요되는 과학기술 경쟁력의 변동폭이 크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 일이다. 그러나 이러한 ‘경쟁력 평가’가 과거 저평가된 것을 바로 잡았다는 점에서 보면 반드시 부정적으로 해석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든다.

평자가 이 평가를 반가운 뉴스라고 정의의 내린 것은 한국 과학기술계가 ‘IMD평가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과학기술부 관료들은 매년 IMD보고서가 발표될 때가 되면 좌불안석이었다. 과학기술에 대한 투자는 늘어나는데 한국 과학기술의 경쟁력은 뒷걸음을 치고 있다는 비판론이 제기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과학기술 경쟁력의 IMD평가는 97년 22위에서 98년 28위로 하락했고 2000년부터 다소 회복됐으나 여전히 20위권 밖으로 맴돌아 왔다. 과학기술 투자는

과학기술 경쟁력 세계순위(2002년)

국 가	순 위
미 국	1
일 본	2
스 위 스	3
독 일	4
스 웨 덴	5

세계 10위권, 연구개발비 증가율에서는 6위로 급상승했는데도 경쟁력은 20위권 이하에 머물고 있으니 자연 ‘과학기술은 무엇하나’라는 차가운 눈총이 쏟아질 수 밖에 없는 노릇이다. 과학기술계는 올 IMD 평가로 일단 국내의 따가운 눈총은 면할 수 있게 된 셈이다

그러나 과연 한국 과학기술 경쟁력이 세계 10위 수준인가? 이런 물음에 대해 답은 ‘글썸..’이다. 이번 보고서에서도 세계 1~8위로 높이 평가된 특허관련 부문만 해도 과잉 평가됐다는 비판론이 제기되어 논란이 일고 있다. 세계 3위로 평가된 내국인 특허의 경우 이 평가에 이용된 2000년 통계는 특허청이 특허업무 개선으로 인한 일시적인 ‘급증’이 반영된 경우라는 지적이다.

또 세계 1위로 마크된 기업연구원 1천명당 특허 건수도 IMF 이후 크게

국 가	순 위
핀 란 드	6
프 랑 스	7
영 국	8
싱가포르	9
한 국	10

줄어든 기업연구소의 연구원 숫자가 높이 평가된 이유라는 해석도 있다. 또 이 평가에서 ‘인구 1천명당 연구개발 인력(21위)’ ‘인구 1천명당 기업체 연구개발 인력(20위)’ 등 인프라 부문이나 ‘의무교육 과정에서 과학기술 교육(30위)’ 젊은이들의 과학기술 관심도(22위) 등 과학문화 부문도 여전히 하위권에 머물러 있어 갈 길이 멀다는 느낌이다. 최근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청소년의 이공계 기피’나 ‘과학기술자 푸대접 현상’ 등이 이 조사에서 뚜렷하게 드러난 셈이다

그렇다고 과학기술계에서는 앞날을 밝게 해 주는 긍정적인 변화가 없는 것이 아니다. 이번 평가에서 10위로 기록된 해외취득 특허라든지 SCI 게재 논문 증가율 1위 등이 한 예이다. 과학기술계는 이번 ‘10위 평가’에 만족하지 말고 더욱 분발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李祥羲의원의 '고군분투'

선거사상 처음 '과학' 이슈 네티즌 지지 미래 밝혀

선거철이 되면 각종 공약이 발표되고 정책을 놓고 설전을 벌이게 된다. 올해 안에 치르어야 될 지자체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여야 등 진영에서는 각종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이러한 선거공약 가운데 서구에서는 과학기술에 대한 정책이 선거의 주 이슈가 되는 것은 흔한 일이다.

미국 레이건 행정부 시절 '별들의 전쟁' (Star War) 계획이나 영국 블레이 정부의 '유전자 변형식품' (GMO)에 대한 정책이 한 예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역대 선거를 돌이켜 보면 과학기술 문제가 선거에서 이슈화가 된 적이 필자의 기억으로는 한번도 없다. 단지 정당들이 선거철만 되면 내는 '과학기술 진흥' 등과 같은 막연한 립 서비스나 수사(레토릭)만 난무할 뿐이다. 우리 주위를 둘러 보면 국민생활과 직결되는 과학기술의 문제가 허다하다. 21세기 국가의 운명을 좌우할 '성장 엔진'의 개발, 청소년의 이공계 기피 문제, 에너지 문제, 핵 쓰레기 처분장 건설, 생명공학 윤리문제 등등. 그러나 어느 정당도 이런 문제에 대해 심층적인 검토를 거쳐 정책으로 내세운 것을 필자의 과문인지 몰라도 들은 적이 없다. 이처럼 과학기술적인 문제가 선거 이슈가 되지 못하는 것은 1차적으로



과학기술계의 정치적인 비중이 작아 대중정치에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는 게 원인이다. 특히 표만 의식하는 포퓰리즘이 판치는 한국 정치 현실에서 집단의 크기가 작은 과학기술에 그만큼 관심이 쏠리지 않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사회구성에서 같은 처지인 서구에서 과학기술에 대한 문제가 민감한 선거이슈가 되고 있는 것을 보면 '집단의 크기'만이 원인이 아니고, 과학문화의 차이가 깊이 작용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우선 과학기술에 대한 대중의 관심 내지는 인식도가 낮으니 아무리 과학기술적인 문제가 심각해도 정치적인 문제가 되기 어려운 것이다. 더구나 우리나라와 같이 사농공

상(士農工商)이라는 뿌리 깊은 과학천 시사상이 물들어 있는 사회에서 과학기술이 사회적인 관심사가 되기는 낙타를 바늘귀에 꿰는 것 만큼이나 힘든 일이라는 생각이 든다.

이런 가운데 비록 야당의 대선후보 경선이지만 이상희(李祥羲)의원이 과학경제를 기치로 내세운 것은 꽤이나 인상적이다. '과학'이 선거의 캐치프레이즈로 등장한 것은 우리나라 선거 사상 처음이 아닌가 생각한다. 이의원은 비록 경선에서는 많은 득표를 하지 못했지만 네티즌들 사이에서 큰 지지를 받았다는 것은 비리로 얼룩진 한국 정치가 개선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 준 것으로 평가될 수 있을 것이다. 하여튼 올해 대선을 기점으로 과학기술계도 종전의 모래알 자세를 버리고 힘을 합쳐 과학의 미래를 정치에 반영하는 적극적인 태세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 때마침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에서도 '과학살리기 1백만 인터넷 서명 운동'을 펴고 있는 모양이다. 이번 선거에서 과학기술계는 대선후보들의 과학기술 정책을 꼼꼼히 따져 미래 한국을 이끌어 가야 할 올바른 지도자를 뽑는 데 마음을 모아야 할 것이다. ①7

姜信龜 <한서대 객원교수>